
동맹미래 학술회의(Webinar)

자료집

2020. 12. 7(월)

공감한반도연구회/국회의원 신원식

'동맹미래' 학술회의

한미동맹은 현재 기로에 있습니다.

우선, 국내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으로 여기며 이를 해소하면 남북 평화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고, 동맹 대신 역내 다자안보로 우리의 번영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자주와 민족 코드가 동맹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동맹을 경시하는 분위기와 함께 기술발전과 전략사상 변화로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를 고려하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역패권 도전과 이를 막기 위한 미국의 적극적 대응이 새로운 냉전을 촉발하면서 미중사이에서 우리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 동맹보다 균형을 주장하는 담론이 강한 형편입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로 비핵국가인 우리를 위협하고 이를 억제하는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은 미국을 겨냥한 북한 핵전력 개발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미동맹은 미중냉전 2.0, 핵무장의 북한 그리고 국내정치의 세가지 도전에 직면해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향후 정기적인 모임 형태의 프로세스로 발전하여 '동맹미래'의 담론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동맹미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에 대한 답을 찾을 예정입니다.

-
- Q1.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인가?
 - Q2. 냉전동맹을 해소하고 다자안보로 가야하는가?
 - Q3. 한미동맹을 해소하면 남북 평화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가?
 - Q4. 냉전 2.0시대, 미중 균형외교는 가능한가?
 - Q5. 중국의 지역패권은 우리에게 전통적인 이익인가?
 - Q6. 미중역전은 불가피한가?
 - Q7. 미국의 힘은 무엇인가?
 - Q8. 미국의 신정부 대외정책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 Q9.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신정부 정책은 무엇인가?
 - Q10. 북한과 북핵문제를 한미공조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 Q11. 냉전 2.0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 프로그램

- 주 제 : 미국 신정부출범과 동맹도전
- 일 시 : 2020.12.7.(월) 14:00~18:00
- 방 법 : 웨비나(온라인 Zoom)
- 주 최 : 공감한반도연구회, 국회의원 신원식

| 시간 | 주요내용 |
|------------------------|---|
| 13:30-14:00 ('30) | 등록 |
| 14:00-14:05 ('5) | 국민 의례 |
| 14:05-14:10 ('5) | [개회사] 윤덕민(공감한반도연구회 대표, 前 국립외교원장) |
| 14:10-14:15 ('5) | [인사말] 신원식(국민의힘 국회의원) |
| 14:15-14:35 ('20) | [주제발제] 저널리스트가 본 동맹의 현주소: '동맹표류와 세가지 도전' 유지혜(중앙일보 기자) |
| 14:35-16:05 ('90) | [1세션] 동맹도전, 핵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김홍균(前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패널: 김태호(성균관대학교 교수) 주재우(경희대학교 교수)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우정엽(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 16:05-16:20 | 휴식 |
| 16:20-18:00 ('100) | [2세션] 냉전2.0과 한미동맹의 미래를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김성한(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 ■ 패널: 천영우(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신각수(세토포럼 이사장) 조태용(국민의힘 국회의원) 신원식(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재호(서울대학교 교수) |
| 18:00- | 만찬 |

<주제발제>

저널리스트가 본 동맹의 현주소
: ‘동맹표류와 세가지 도전’

14:15 ~ 14:35 (20분)

-
- 발제: 유지혜(중앙일보 기자)
-

저널리스트가 본 동맹의 현주소

유지혜(중앙일보)

▶ 들어가며

- 언론 입장에서 국민의 관심과 주목도가 높은 한국의 당면한 외교 현안은 크게 미·중 간 갈등 격화 문제와 사실상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한 관련 문제 두 가지 이슈로 보임. 두 가지 이슈 모두에서 한·미 동맹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지님. 그 깊이와 수준에 따라 동맹을 상황을 풀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구속처럼 느낄 수도 있기 때문. 지금부터 던지는 질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가지 현안에서 한·미 동맹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외부에서 관심 있게 바라본 관찰을 바탕으로 함.

▶ 관찰1 =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자체가 동맹 약화를 예고. 특히 당시 한국은 탄핵 이후 리더십 공백 국면으로 트럼프발 돌발 요소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든 상황.
-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 대통령으로 보기 어려운 기행을 거듭해 한국 비롯한 동맹국을 당황하게 만들어. 실제로 4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동맹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많은 건 사실.
- 그런데 그 원인을 100% 트럼프의 천박한 동맹관과 독특한 통치 스타일에만 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
-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에 유화적 태도를 취해온 것을 비판하며 자신은 다르다는 점 강조. 실제 취임 직후 예민한 대만 문제부터 건드리고,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하던 중 시리아에 미사일 공격을 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일관. 무역 문제에서도 시종 거칠게 몰아붙여.
- 여기서 드는 의문은 한국은 이런 트럼프 시대의 미중관계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대미 전략, 대중 전략을 세웠는지 여부.

▶ 관찰2 = 북한의,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중국과 사드 갈등을 풀기 위해 적극적 노력 했는데 양자관계 못지 않게 북한 문제가 동인이 돼. 이른바 3불로 상징되는 사드 합의를 서두른 것도 연내에 사드 봉인-문재인 대통령 방중-시진핑 주석 방한 확답 등의 스케줄을 완성해 중국과의 협력을 토대로 평창 올림픽을 북한을 끌어내는 계기로 삼으려 한 것.
- 문재인 정부 초기 3불 합의는 한미 동맹 불안의 씨를 뿌린 측면이 있다고 봄.
- 하지만 그럼에도 표면적으로 큰 갈등이 폭발하지 않은 이유는 2017년엔 북한의 고강도 도발로 인해 정부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대북 압박 강경기조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 또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화해 분위기 조성됐을 때는 빅 이벤트 통해 외교적 업적 남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스타일을 정부가 잘 활용했고, 미국 역시 북한에 최대한 관여하려는 한국의 열망을 니즈에 맞게 활용한 측면.
- 물론 북한이 어쨌든 협상 테이블에 나온 배경은 사실상 핵무기 완성이라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 크지만 문재인 정부가 끊임 없이 대북 포용적 메시지를 보내고 평창을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 긍정적 동인이 돼 보다 수월한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이라는 점은 평가할 만 함.
- 하지만 여기서 '2017년 북한이 무작정 도발을 이어가지 않았다면' 반대로 '2018년에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고 도발을 계속했다면'이라는 가정을 하게 됨.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가 계속 같은 페이지에서 대북 전략 공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 즉 북한 문제를 두고 서로 유리하게 이용하는 표면적 공조가 아니었느냐는 의문.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붙여놓은 것이지, 원칙이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 관찰3 = Wag the Dog

- 그래서 북핵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자 잠복해 있던 동맹 간 이견이 더 쉽게 드러나는 양상. 하노이 노딜은 이해관계에 의해 의기투합했던 트럼프 백악관과 문재인 청와대가 근본적으로 어떤 다른 길을 걷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배달사고'를 내는 상황까지 간 것 자체가 문제.

- 사실 미·중 간 대립과 북핵 능력 고도화는 둘 다 당연한 외교적 도전이지만 굳이 따지자면 미·중관계가 북핵 문제의 상위구조. 미국의 대북 정책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고 대아시아전략의 일부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
- 그럼에도 남북관계가 좋아야 우리나라가 미중 사이에서 움직일 공간이 넓어진다는 명제 자체는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전제가 성립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 김정은의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이용 가치를 ‘대미 설득용’ 정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차례 드러났기 때문. 미국과 꼬일 때는 도움을 구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상대는 같은 핵보유국인 미국이며, 자신들이 원하는 안전 보장도 미국만 해줄 수 있다고 생각. 속된 말로 한국은 잡아놓은 고기 관리하는 수준으로 대하는 느낌.
- 특히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란 것은 촘촘한 지금의 국제 제재 체제 하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 제재 위반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협력의 범위와 정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음. 북한은 그 정도 위험을 무릅쓸 게 아니면 말도 건네지 말라는 식인데 대동강 맥주랑 물물교환하자는 식의 제안을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
- 결과적으로 북한의 호응도 없고, 상위구조인 미·중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가운데 계속 북한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중심으로 대미·대중 전략을 짜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동맹에 직접적 영향으로 이어짐.
- 이제는 도쿄 올림픽을 북한 문제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식으로 한일관계로까지 왜곡 확대. 대일관계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 양자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더 크고, 또 확장을 하더라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미·중 간 대립구도에서 비슷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음. 이와 별론으로 도쿄 올림픽이 ‘평창 어게인’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 북한도, 정세도 당시와는 다르기 때문.

▶관찰4 = 양다리위해 해피엔딩

- 사실 대부분 중견국, 일부 강대국조차도 미·중 간 대립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 어느 한쪽만 선택해선 생존하기 힘든 환경. 하지만 그런 나

라들이 모두 우리처럼 미·중 모두로부터 의심받고 압박받진 않아. 그 이유는 우리 캐릭터가 애매하기 때문.

-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외교전략조정회의 거쳐 확대협력 외교·일관성 있는 외교·전략적 경제 외교 등 3가지 방향 설정. 1년이 지난 지금 세가지 방향이 어느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됐는지 떠오르는 게 사실 없음.
- 강경화 장관은 3대 원칙과 관련 7월 회의에서 “충분히 유연하되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국익 증진을 위한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자”고 밝혀. 솔직히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놓은 것 같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양다리 걸치면서 해피엔딩을 맞고 싶다는 뜻처럼 들림.
- 사실 대부분 중견국, 일부 강대국조차도 미·중 간 대립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 어느 한쪽만 선택해선 생존하기 힘든 환경. 하지만 그런 나라들이 모두 우리처럼 미·중 모두로부터 의심받고 압박받진 않아. 그 이유는 우리 캐릭터가 애매하기 때문. 특히 사드 합의는 중국에 ‘한국은 밀면 밀리는 나라’라는 최악의 교훈 심어줬다고 생각.
- 이번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왔을 때 보인 안하무인격 태도도 결국 여기서 기인. 바이든 행정부 수립 이후 미·중 간 갈등 구도에서 한국이 필요한 쪽은 사실 중국인데, 이런 상황에서조차 태도는 말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 여전히 중국 쪽 발표에는 시진핑 주석 방한 이야기 한 줄이 없고, 한국 발표에는 없는 5G 협력이나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중국은 합의사항으로 발표.
- 사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외교의 세계에서 동맹도 영원할 수 없음. 동맹은 종교가 아님.
- 하지만 지금처럼 선택도, 양다리도 정답이라 딱 잘라 말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기본으로 돌아가 입장과 원칙을 정리해야 함. ‘중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는 상대인가’라는 직접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함. 이는 단순히 경제력, 군사력만 말하는 게 아님. 탈북자들을 강제 복송하는 중국과, 홍콩보안법을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국과, 수틀리면 주변 약소국을 힘으로 찍어누르며 길들이려는 중국과 같이 갈 수 있는지의 문제임. 한국의 대통령이 “한·중은 공동운명체”라고 말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지. 시진핑 주석이 사드 빼라는 정상회담에서 “체육 교육 언론 스포츠 다양하게 교류 협력하자”며 쓸 말이 아님.
- 중국과 척을 지자는 뜻이 아님.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됨. 중국이라는 파트너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 할 수 없는 것과 해선 안 되

는 것의 선을 우리 내부적으로 정해야 함. 이런 결정은 청와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외연을 확장해 의견 수렴의 대상 범위를 넓혀서 해야 함. 외교에서 포퓰리즘은 절대 지양해야 하지만 이런 공감대의 기반 없는 정책 추진은 결국 좌초할 수밖에 없기 때문.

- 하지만 지금은 이런 외교 안보 이슈 하나하나가 모두 정쟁의 소재로 전락한 기분. ‘초당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진 지 오래.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특히 북한 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최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만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북한을 규탄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월북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정부가 더 혈안이 돼 있는 느낌. 문제의 본질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 책무를 다 했는지인데, 월북하려는 사람 하나 구하자고 전쟁을 일으켰어야 하느냐는 식으로 여론몰이.

▶관찰5 = 사랑은 돌아오는 걸까, 변하는 걸까

- 바이든은 동맹의 요술 방망이가 아님. 동맹이 약해진 게 트럼프만의 탓이 아니듯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다고 마법처럼 동맹이 저절로 복원되는 것도 아님.
- 쉽게 생각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이 했던 결정들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다면’이라는 가정을 해보면 됨. 중국과의 사드 합의 및 3불 원칙 표명, 북한과의 9·19 군사 합의, 한·일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 등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또 기본적으로 미·중 간 대립구도는 일희일비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어도 이미 구조적 조정의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 심화의 방향은 달라질 수 없음.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 대사를 비롯한 바이든 측 인사들이 최근에 한미동맹의 확장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함의를 봐야 함. 동맹국들과 뭉쳐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시도는 다자주의와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 유용하게 활용할 전략이고 이는 한국에 대한 여러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히 방위비를 얼마 더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 ABT가 될 것이라는 예상 중에도 바이든 인수위가 ‘인도 태평양’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건 대중전략에의 함의일 수 있어.
- 중국이 최근 다시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에 비유하며 비판하는 것 자체가 이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 미국이 미·소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동맹의 힘과 시너지 효과를 냈기

때문. 미·중 간 냉전 2.0에서도 미국의 기본 전략, 특히 바이든의 전략은 동맹 및 우방 세 규합에서 시작될 것을 중국 역시 잘 알고 있다는 뜻.

- 양쪽으로부터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너무 좋아할 것도, 의미를 폄훼할 것도 없음. 한국이 독자적으로 뭘 잘해서 가치가 올라간 것이라기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크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잘만 하면 레버리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 건 사실이기 때문.

▶나가며

- 현재 우리의 환경은 미·중 냉전 2.0, 핵무장의 북한, 국내정치라는 세가지 키워드의 위협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위험 수위를 고조시키는 패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동맹 활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 이런 위협에 대처할 때 가장 믿을 수 있고 강력한 수단은 아직까지는 동맹이기 때문. 다자안보가 동맹을 대체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지만 동맹에 준하는 이해관계의 일치, 가치관의 일치, 거기서 기반한 상호 신뢰를 담보하는 다자안보협력체의 구성이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뤄지긴 힘들고, 사실 시간을 아무리 주더라도 그런 조건을 달성할 수 있을 지는 또다른 문제. 현상황에서 가장 유용하고 옳은 수단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할지, 이를 위해 얻는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선택지는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음. 우리에게 모의고사란 없고 매일이 실전 수능이기 때문.

<세션 1>

동맹도전, 핵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14:35 ~ 16:05 (90분)

■ 사회: 김홍균(前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태효(성균관대학교 교수)

주재우(경희대학교 교수)

■ 패널: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우정엽(세종연구소 연구위원)

① 동맹도전, 핵 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김태효(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 북한 핵문제의 성격과 대처 방안

- 북핵 프로그램과 북한의 핵 보유를 무효화하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진입.
- 강압수단을 통한 북핵 해결을 누구도 원치 않으며, 협상을 통한 해결은 북한이 거부.
-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북핵 해결’을 주장하는 사람은 무지하거나 대중을 기만하려 하는 자.
- 북한 핵/미사일 인프라의 양적·질적 확대를 억제하는 대북 맞춤형 제재와 국제공조를 추진.
- 북한 핵/미사일의 탐지·식별·선제타격·대응·응징 능력을 강화하는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 북핵능력 억제와 북핵대비 보복능력을 한미동맹이 주도, 북한 지도부에 핵 무용론을 확산.

2.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 4년 임기 내 새로운 미·북 관계를 지향하기보다는 북한 리스크 관리에 치중할 것임.
- 2021년 북한의 미국 관심 끌기/한반도 긴장 유발 전략에 대해서는 최소대응이 상책.
- 북한 문제는 미국 동아시아 정책의 골격인 대중정책의 부수 과제로 다루어질 것임.
-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관심사는 중국을 포위하는 자유민주 글로벌 연대의 구축.
- 한국의 가담 여부, 가담 시 그 적극성과 담당 역할의 내용이 한미동맹의 방향을 결정.

- 미국의 중국/북한에 대한 공세적 인권외교와 한일관계 개선 요구가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

3. 한국의 당면과제와 정책 고려사항

-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은 국내정치가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
- 미국과 북한 모두 한국에 어떤 차기 정부가 들어설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
- 한·미 간 확고한 동맹비전의 공유 없이 애매한 친중, 맹목적인 친북 정책의 지속 전망.
- 대북제재 이행, 종전선언/평화협정,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한·미 간 이견 관리 문제.
-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
- 북한 내 발생 가능한 각종 급변 시나리오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의 대비태세 취약성 노출.

신냉전 2.0, 동맹도전, 북핵 대응

주재우 (경희대)

미중패권경쟁 = "신냉전"? 55년으로 회귀?

| | 냉전 | 신냉전 |
|----------|-----------------------------|--|
| 목표 | 상대진영의 확장과 전쟁 억지 | 상이한 체제/정권 행동 변화 |
| 목적 | 지자유진영의 이념과 가치 확산 및 공고화 | 세계 자유 민주주의질서 수호 |
| 대상 | 소련 및 위성국 | 중국공산당 |
| 체제 | 양극 | 단극 |
| 공간 개념 | 육지 | 육지, 바다, 사이버, 우주 |
| 전략 | Containment 집단안보체제, 동맹체제 | Coalition (allies, like-minded states) 동맹과 동맹 간의 동맹체제 |
| 전략사과의 기반 | 지정학 | 지리학, 지리전략학 |
| 전술 | 군비경쟁 | 가치 기반의 다자 협력 및 압박 |
| 공통점 | 가치와 이념 지배적 외교 사고 | |

미중은 패권경쟁이 아니다

- 패권: 어떤 집단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이자 지위이며 이의 지배를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칭, 그 영향력에는 보편성과 정당성이 구비되어야 함
- 경쟁: 상호 영향과 상호 작용으로 경쟁이 '나선형 효과(spiral effect)'를 양산, '딜레마'(특히 안보딜레마)와 같은 결과 유발
- * 미중 패권경쟁은 지구가 아닌 사이버공간과 우주에서 진행 중
- 미국의 관세보복조치, 화웨이 제재, 인-태전략, 쿼드는 징벌적 조치, 행위를 바꾸기 위한 목적
- 자유주의 국제질서, 국제제도, 국제법과 규범, 이의 토대인 가치와 이념을 수호하기 위한 대응
- 중국이 변하면 이런 조치는 사라질 것임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신전략

-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
- : 공공재 제공에서 공유와 수호로 전환, 새로운 성격/성질의 다자주의 모색 중
- 시장, 질서, 가치, 사상(이념), 인권 등을 공유, 확산, 수호 차원에서 세계 및 지역 질서 유지를 추진
- 탈냉전시대 이후의 미국 주장
- 동맹과 우방의 더 큰 책임과 의무 공유 강조
- 21세기 미국의 해외주둔군재배치(Global Posture Review), 전략적 유연성, 전방배치, 군사혁신, 군전환, 네트워크화 등
-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1978 개정, 1997 수정, 2015 수정)

미국 추동의 중국

- 이런 질서 수호 전략 변화에 틈새를 노린 중국
- 90년대 “블루 네이비(Blue Navy)” 사업 시작
- 남중국해 갈등 표출,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의 본질적 변화
- 해양문제: 영토주권/태평양 진출입의 문제 vs. 항행의 자유
- 남중국해/동중국해의 80%를 영해 주장
- 21세기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군사훈련(“화평사명”) 시작(2007)
- 2007년 일본의 인-태 개념과 Quad 소개
- ‘일대일로’ 2013년 추진과 인-태전략 2018년 소개

바이든의 패권정책: 연속성, 지속성

- 2019년 7월 뉴욕시립대 연설과 2020년 3/4월호 Foreign Affairs, “Why America must lead again”
- 바이든: 36년 상원 의원과 8년 부통령의 외교 경험
- 바이든의 전략: 동맹과 ‘뜻을 같이하는 나라(like-minded states)’
- 바이든의 다른점: 관세문제만 재검토할 용의 있음
- 다자주의: 배타적이고 비개방적, 국제기구 활용 및 복귀
- 인권문제: 정책결정에 복병

향후 미국의 대 중국 대응 방향

- 부시 행정부(2001-2008)의 동아태 전략의 기초 현실화 및 강화
- 반테러 동맹체제 구축, 대 중국 협력과 경쟁 병행, 지역 및 다자 주주의 보완적 활용
- 국제제도, 법, 규범, 가치와 이념 수호 위한 연대 강화
- 중국의 위법과 불법 행위 지속 vs. 이의 교정 노력
- 중국의 예외주의와 일방주의 확대, 민족주의 기반 소프트파워 공세 강화
- 현실은 한반도 남북한을 모두 (동시 제재를 통한) 통제

동맹의 도전과제

- 이 모든 과정에 변수로 북핵이 작용
- 참여와 불참의 문제가 아님
- 우리 국익이 문제이고 관건
- 중국의 일대일로 군사전략과 해양작전전략 이해 필요
- 중국의 제재 전략의 본질과 성격 이해 필요
- 중국에 대한 '미신' 타파,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역할
- 미국 주도에 중국은 반응, 북핵 문제도 동일한 접근법 견지
- 중국의 대북 우려: 북한의 유실, 상실, 자발적 이탈
- 판세의 현실적 직관 필요
- 국익과 가치 중심의 원칙 및 전략 수반 외교 대응 필요

‘미국 신정부 출범과 동맹 도전’

우정엽 (세종연구소)

2020.12.07

■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관련 전망

- 미국 선거 전, 바이든 행정부가 될 경우 한미 동맹에는 유리하지만,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제기됨.
- 그에 따라 바이든 당선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다소 높았음. 예를 들어, 우리 언론과 정부에 가까운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시의 대북정책이 바이든 정부가 취할 대북 정책보다 훨씬 우리에게 낫다는 의견이 많이 나옴.
- 바이든 행정부 보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낫다는 판단은 다음과 같은 논점에 따라 나오고 있음.
 -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협상이 바이든 당선인의 실무협상 위주 접근법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둘째,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바이든 당선인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북미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음.
 - 셋째,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관련 라인업과 정책 검토에 상당한 시간 소요로 인한 협상의 지연 가능성 있음.
- 그에 따라 동경 올림픽을 이용한 정상회의 추진 및 트럼프 정책 계승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논점에 대한 반증을 통해 미국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성 예측을 해볼 수 있음.
 - 첫째, 바이든 당선인의 바텀 업(bottom-up) 방식의 비판의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협상의 실질적 결과가 있기 때문임. 트럼프 대통령 집권 4년 동안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 가능성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전까지인 1년 정도임. 2017년에는 최대한의 압박을 기조로 삼았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냉랭한 분위기였음. 2019년 하노이 이

후,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실무협상을 거론하였고, 2019년 10월 스톡홀름 협상 열렸으나, 아무 성과없이 종료. 이는 트럼프의 탑다운(top-down) 접근이 북한과의 협상 또는 관계 진전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 북한이 협상에 나오겠다고 한 부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2019년 하노이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 없는 정상회담이 정치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 후 실무협상을 계속해서 강조해왔음. 트럼프 정부에서 역시 2019년 하노이 이후에는 아무런 진전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이든 정부에서의 정책, 특히 실무 협상을 중시하는 접근방법이 트럼프 정부 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움.

- 둘째,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토론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북미관계를 어렵게할 것이라는 예상 역시 모순점이 있음.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sick puppy라고 발언하여,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킴. 같은 해 유엔 연설에서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발언함. 이러한 행보는 2018년 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음.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지한 제안과 진전을 보일 경우, 바이든 행정부도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셋째, 2018년 미국과 북한 사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미국은 대북라인을 실질적으로 갖추지 못했음. 당시 북한 정책 대표 조셉 윤 부차관보는 사임하였고, 이후 북한의 협상의사는 우리 정부를 통해 미국에 전달하였음. 싱가포르 회담 이전에 미국은 랜디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 성 김 주필리핀 대사, 엘리슨 후커 백악관 한국 담당관을 협상의 대표로 선정, 2018년 가을에서야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임명한 전례가 있음. 북한과의 협상은 어떤 조직이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함.

○ 논의 분석의 결론 및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제안

- 트럼프 정부 당시의 비교적 순조로운 미국과 북한 관계는 2018년 봄부터 2019년 봄까지 북한이 협상을 하겠다고 나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북한이 나왔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성 역시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북한이 협상을 제시할 경우 바이든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어떤 단어를 사용했건, 대북 라인이 갖춰지지 않았건 미국은 협상을 이끌어 낼 팀을 구성할 것임. 팀으로 발탁될 인재의 풀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보

다 많을 것으로 예상.

- 유일한 차이는 2019년 하노이 회담 이전에 제기되었던 북한의 비핵화를 최종적으로 이끌어 내는가의 여부에서 하노이 결렬이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그러한 합의가 불가능한 기준을 세워놓음.
- 따라서, 2019년 하노이 이후 미국 행정부의 방향성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음.
-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참여 의사가 중요하며, 2018년 초처럼 북한이 우리와 직접 소통하느냐의 여부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것.

<세션 2>

냉전2.0과 한미동맹의 미래를 생각한다

16:20 ~ 18:00 (100분)

■ 사회: 김성한(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천영우(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신각수(세토포럼 이사장)

■ 패널: 조태용(국민의힘 국회의원)

신원식(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재호(서울대학교 교수)

한미동맹의 미래를 생각한다

천영우

1. 동맹의 생명은 신뢰와 위협인식의 공통성

- 서로의 의도를 의심하고 신뢰가 없으면 죽은 동맹.
 - 정책 공조는 고사하고 전략적 교감과 소통이 어렵고 민감한 정보도 공유할 수 없다. 미국이 우리정부에 제공하는 정보가 함부로 누설되고 북한에도 넘어갈 수 있다고 의심되면 언론에 보도되고 북한에 넘어가도 문제가 없는 수준의 정보만 공유할 수밖에 없다.
 - 협의를 해도 동문서답하고 회담결과에 대한 이해가 상이. 한국은 합의했다고 하는 데 미국은 부인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건 신뢰 부족에 기인
- 안보에 대한 위협이 어디에서 오는지, 누가 적이고 우방인지에 대해 인식이 다르면 허울뿐인 동맹. 공동의 적이 없는 동맹은 동맹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는데 한국은 아니라고 하고, 일본에 대해서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철천지원수로 여긴다면 동맹을 지탱할 공통의 안보이익이 없는 것.
 - 미국은 북핵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급박한 위협이라고 인식하는데 반해, 한국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중국 포위.봉쇄가 더 큰 위협이라고 믿는다면 온전한 동맹인가?

2. 향후 동맹의 미래를 결정할 3대 요인

- 대북 정책
 - 미국은 비핵화를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북한의 폭압체제와 인권탄압도 제기할 것.

-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선택할 단계적, 점진적 접근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유사. 다만, 제재완화의 조건과 시기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이 공조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
- 미국은 제재를 비핵화 협상의 핵심 레버리지로 삼고 북한의 핵능력 감축 수준과 진도에 맞추어 완화하려고 할 것.
- 우리 정부는 비핵화보다 남북 교류협력을 더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북한이 부분적 동결에만 동의해도 제재를 완화하고 대북 지원 재개하자고 주장할 것.
- 제재해제의 시점을 둘러싼 한미간 갈등도 불가피. 문재인정부가 임기 중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에 집착하면 비핵화에 진전이 없더라도 제재부터 완화하자고 요구할 가능성. 이는 제재를 비핵화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충돌을 예고.
-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도 한미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핵심 외교정책 어젠다로 설정한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대북 전단살포까지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김정은 폭압체제를 수호하는데 앞장 선다면 한미양국이 추구하는 근본적 가치가 충돌하는 것.
- 한국의 대중국 정책
 - 친중 굴종은 미국의 중국견제 봉쇄 전략과 충돌
 - Quad+ 참여여부, TPP가입여부, THAAD추가배치 문제가 한미관계를 시험할 가능성
-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자세
 - 한.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동맹으로서 한국의 가치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의구심은 증폭될 가능성.
 - 한일관계는 한미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

3. 주한미군의 미래

-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될수록 주한 미군의 안전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우려는 커질 것
- 미군을 보호할 THAAD추가 배치에 한국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미군 철수 주장이 힘을 얻을 것.
 - 역외균형 전략과 확장억지로 미군 주둔 없이도 동맹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정당화
- 미국은 일단 미군철수를 북한 비핵화와 연계할 것이나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핵능력 제한('핵동결+중장거리 미사일 폐기')의 대가로 미군감축 카드를 이용할 가능성도 불배제
- 미군철수 이후의 안보전략과 동맹체제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

냉전2.0과 한미동맹의 미래를 생각한다

신각수

Q1.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인가?

-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되고 냉전 기간 한반도의 안전을 지켜왔지만 탈냉전이후에도 동맹으로서 외연을 확대해 왔음. 따라서 냉전동맹이란 표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 한미동맹은 한국외교의 기축으로서 신생독립국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안정된 안보환경과 경제지원을 해준 소중한 전략자산임. 한미동맹에 의한 주한미군 주둔은 북한의 군사위협 속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동하였음.
- 북한의 핵무장이 거의 완성된 지금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을 억지할 핵우산과 확장역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성이 증가하였음.
- 또한 한미동맹은 탈냉전이후에도 지정학적으로 유동적인 동북아 전략 환경 속에서 우리의 독자적 전략공간을 확보하는 필수수단임. 부상하는 중국의 공세적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지렛대라는 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게 현실임.
- 한미동맹의 외연은 군사 차원을 넘어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되었으며, 양자차원을 넘어 지역, 세계 차원에서도 협력의 틀을 넓혀가고 있음.

Q2. 냉전동맹을 해소하고 다자안보로 가야하는가?

- 우리 안보를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다자안보는 동맹과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동맹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임.
- 또한 역사상 다자안보가 성공한 전례는 NATO를 제외하고 별로 없다는 점에서, 동맹은 현금이고 다자안보는 약속어음에 불과함.
- 다자안보(집단안보)는 유엔에서도 시도되었지만 실제 운용 면에서 무력충

돌을 방지하는 데 실패하였음. 무력에 대한 대응은 무력밖에 없다는 점에서 무력을 조직화할 능력이 없는 다자안보체제는 현실적으로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음.

- 동북아의 경우 한·미·일 남방 3각과 북한·중·러 북방 3각의 구도로 되어 있어서 다자안보체제 구축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이며, 최소한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이런 구상의 실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요원한 상황임.

Q3. 한미 동맹을 해소하면 남북 평화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가?

- 한미동맹을 해소하면 오히려 남북평화에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큼. 남북 평화의 여건은 북한의 위협을 억지할 실제 능력에 의존하는바,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에게 한미동맹의 해소는 핵 공갈·위협을 할 수 있는 여지만 높여 바로 한반도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
- 남북평화공동체는 북한의 올바른 태도에 달려 있음. 우리가 북한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응하는가에 달려 있음. 북한이 현재의 3대 세습 전체주의체제의 속성에서 벗어나 비핵·개혁개방의 길로 전환하지 않는 한 평화공동체 구축은 요원한 것이 현실임.
- 남북평화공동체 구축은 희망 고문으로 달성될 사안이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조성해 가는 길이 가장 확실한 접근방식임.

Q4. 냉전 2.0시대, 미중 균형외교는 가능한가?

- 우선 냉전 2.0시대, 균형외교는 정확한 용어라 하기 어려움. 미중대결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소 냉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냉전 2.0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임. 또한 균형외교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한 용어로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개념임.
- 미중 대립 속에 우리의 독자외교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임. 미중의 깊은 상호의존도에 비추어 탈

동조화의 영역은 제한적이라고 봄. 미중 선택의 문제로 치환하지 말고 사안의 성격과 관련 가치, 이익, 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관되게 행동한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한중관계의 전략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임.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하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중관계를 관리해가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고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을 역지하는 효과도 기대됨.
- 한미동맹을 중시한다는 것이 미국의 이해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한미 간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 이를 조용히 잘 조정함으로써 충돌로 인한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일본의 아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의 밀월관계를 통해 대중, 대러 관계에 있어서 관리 공간을 확보했던 것처럼 긴밀한 한미동맹은 한중관계를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

Q5. 중국의 지역패권은 우리에게 전통적인 이익인가?

- 중국의 지역패권은 우리에게 지정학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우리 외교의 편란드화를 촉진시킬 우려가 큼. 중국은 전통적으로 주변국과의 상하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수직적 중화질서에 익숙함.
- 최근 인접국에 대한 공세적 외교도 중국이 인접국외교의 지표로 표방하는 親·誠·惠·容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동아시아에 대한 세력권 구축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음.
- 한국은 중국이 지역패권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외교 목표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지속적 관여, 중층적 지역체제 구축을 통한 법치의 확립, 중국의 책임 있는 이해당사국으로서의 행태 확보를 추구해야 할 것임.

Q6. 미중역전은 불가피한가?

- 현재의 추세대로 경제발전이 진행된다면 2030년 전후 중국 명목 GDP가

미국을 추월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중진국 함정, 과다부채 함정, 고령화 함정에 의해 현재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움.

- 또한 중국이 미국을 성장의 면(flow)에서 따라잡더라도 부의 면(stock)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음. 미국은 1870년대 초 영국을 추월하여 세계1위 경제대국이 된 이래 150년 넘게 부를 축적해 왔음. 중국은 1978년 개방 이후 고도성장을 해왔지만 40여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큰 격차가 있음.
- 그리고 패권은 단순히 경제력만이 아닌 군사, 기술,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중국은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현재 미중 대결은 동아시아라는 지역 차원의 경쟁이라 보는 게 타당하며, 패권 이양까지 가려면 훨씬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여 실현 여부가 미지수이고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봄.
- 미국이 세계1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나서 실제 패권국가가 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바, 별다른 특이 사항이 돌출하지 않는 한 최소한 금세기 후반까지 미국의 패권은 유지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Q7. 미국의 힘은 무엇인가?

- 미국은 경성권력과 연성권력 양면에서 모두 세계 1위의 실력을 갖추고 있음. 경제력의 경우 최첨단 원천 과학기술을 보유한 국가로서 GAFA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 4차 산업에 필요한 기축통화로서 세계 금융계를 지배하고 있음. 또한 셰일석유·가스 개발로 에너지 수출국가로 변모함으로써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중국보다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음.
- 국방력에 있어서도 예산 면에서 세계 2-6위 국가의 국방비보다 많으며 군사기술면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고 70여개의 동맹·파트너 관계를 통해 범세계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인구구조도 이민을 통하여 활력 있는 피라미드형으로 인구절벽을 고민하는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임.
- 연성권력의 면에서도 미국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 대중문화를 선도

하고 있으며 열린 민주주의를 통해 세계의 인재를 끌어들이는 교육과 과학기술의 선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미국우선주의 포퓰리즘으로 이런 미국의 장점에 흠결이 발생하였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물론 코로나19 대응에서 보듯이 미국 사회의 양극화에 따른 통치(governance)의 문제점이 노정되었지만,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의해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미국사회의 경제·인종·정치·세대 격차가 분열을 야기하여 미국의 국내정치를 피폐화시키고 세계리더십 발휘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적은 미국'이라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음.

Q8. 미국의 신정부 대외정책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 바이든 정부는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슬로건처럼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통적 외교노선으로 복귀할 것으로 봄. 트럼프 정부의 동맹·다자주의 무시 독자노선에서 벗어나 동맹·국제기구를 중시하는 협력적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트럼프 정부의 파괴적·거래적 외교행태를 청산하고 인권·반부패·민주주의 등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를 할 것임.
- 바이든 대통령 자신과 풍부한 외교인력 풀에 비추어 예측가능하고 세련된 외교를 구사할 것으로 봄. 미국 국내에서 트럼프즘이 여전히 세력을 펼치고 있음에 비추어 ‘중산층을 위한 외교’에 중점을 두어 통상문제에 있어서 FTA 체결을 자제하고 미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노동·환경·안보 등의 요소를 통상규범에 반영시키려 노력할 것임.
- 외교의 군사화를 억제할 것이며 외교, 개발, 제도 등을 중시할 것으로 봄. 트럼프 정부에서 탈퇴한 국제기구와 조약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사·의지연합, 지역기구, 국제기구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들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고 미국의 이익을 투영해 나갈 것임.
- 지정학적 도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주된 대상이 될 것임. 특히 중국에 대한 대응이 대외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가장 중요한 정책 분야로 외교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봄.

Q9.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신정부 정책은 무엇인가?

-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의 근간이 동맹국과의 협조 복원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 시기의 헝클어진 동맹관계를 원상으로 회복하려 할 것임. 동시에 미국이 부상하는 중국과의 경쟁과 대립에서 동맹국들의 협조를 확보하려고 하는 만큼 동맹 중시와 동맹의 책임분담을 동시에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핵심축(linchpin) 동맹국인 한국의 적극적 협력을 모색할 것이며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3각 협력의 복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판단됨. 이런 맥락에서 장기 악화상태에 있는 한일관계의 회복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양국의 관계회복을 위해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봄.
-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고려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10권의 중견국가 한국이 지역·세계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쌍무화를 실질적으로 견인하기를 기대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한국은 한미동맹이 유동적 전환기에 있어서 우리의 전략자산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이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야 함. 자유가 공짜가 아닌 것처럼 동맹도 공짜가 아니므로, 끊임없는 보수유지로 힘을 발휘하도록 해야 함.

Q10. 북한과 북핵문제를 한미공조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은 결정적임. 북한이 서울 아닌 워싱턴을 통해 북핵 문제를 교섭하려고 하는 이상 우리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우리는 철저한 한미협력을 통해 평양이 서울을 통해 워싱턴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각인시켜나가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비현실적인 입장을 빨리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미 완성단계에 접어든 북한의 핵무장 상태를 고려하면 유일한 압박수단인 제재의 실효적 이행에 힘을 합하면서 일·중·러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단합된 대응구도를 만

들어야 할 것임. 이를 통해 북한이 핵과 경제개발은 병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비핵화에 응하도록 해야 함.

- 단기적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사실인 만큼, 2-3 단계(동결-감축-비핵화)의 점진적 비핵화 로드맵과 검증체제를 핵심으로 한 해법을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 이를 토대로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함.
-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도 제기할 것을 예상되는 만큼 기존의 인권 무시정책은 한미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우리의 복안 준비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 트럼프 정부의 미북 회담은 당사자인 우리가 간접적 역할에 그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빠져 있어서 실효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만큼 실질 당사자들인 남·북·미·중의 4자회담 틀을 복원하는 방안에 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Q11. 냉전 2.0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미중 양국의 정책에 비추어 향후 미중 갈등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임. 우리의 전략자산인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며 그런 노력 가운데 한중관계가 관리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미동맹에 관한 우리의 자세를 신뢰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과 일관되고 원칙에 입각한 정책집행을 꾀해야 함.
-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이므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실적을 쌓음으로써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함.
-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한중관계를 관리할 지렛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선택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할 수 있으며 그런 방향으로 끊임없이 정책을 조정해가야 함.

냉전 2.0과 한·미 동맹의 미래

정재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 11개의 질문 중에서 4개에 대한 답을 제시함.

● 냉전 2.0에 대하여

- a. 2010년대 - 특히, 2017-19년 기간 - 네 가지의 주요 특징이 드러남.
 - 미·중 간 국력 차이의 감소세 지속
 - 미·중 상호인식의 악화(esp. 미국인의 대 중국 인식 악화)
 - tit-for-tat escalation
 - flash points에서의 기 싸움 증대
 - 전반적으로 미·중 관계에서 협력보다는 경쟁과 대립의 비중이 더 많아지는 상황으로 감

- b. 2020년 COVID-19의 국제정치
 - 국제사회가 비전통적 안보위기 상황에서 기대했던 同舟共濟가 아닌 各行其是 상황으로 치달음
 - 위기관리/홍콩·신장/판데믹의 근원 논쟁 등 --> 규범/가치를 중심으로 한 체제 논쟁을 포함한 전방위 대립과 경쟁의 전개 --> 최소한 냉전 1.7의 상태

● 미·중 세력전이는 가능할 것인가?

- A zillion dollar question --> 현재로서는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질문임
- Homework for Biden
- 전략 경쟁 vs. 패권 경쟁(indicators는?)
- global game과 regional game의 분리 가능성?
- '분할 패권'(bigemony)의 가능성은?

- 우리에게 지금 동맹이란 무엇인가?
 - ‘taboo/myth’ vs ‘만약의 근원’ 사이에서의 건강한 균형 모색이 절실
 - 현 시점에서의 alternative는 존재하는가?
 - 비군사적 위협에 있어서의 동맹의 구체적인 역할은?
 - public opinions vs. elite perceptions
 - 과연 다른 출구가 있는가?

- 미·중 ‘균형외교’는 가능한가?
 - 과연 한국이 그동안 해온 것은 균형외교인가?
 - 동맹 보유국에게 있어서의 균형외교란?
 - 여러 이론적 지표로 볼 때, 지난 4년의 한국 외교는 ‘눈치 보기’와 편승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됨
 - 한국정부는 경제제재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 한국 국민들은 주권과 국격의 수호를 위해 과연 어디까지 불편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가?

[끝]